

휘발성유기화합물질 규제업종 확대

발암성분이면서 오존형성을 촉발해 지구온난화를 가중시키는 벤젠, 톨루엔, 부탄, 원유, 휘발유, 납사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 volatile organic compounds)규제업종이 대폭 확대된다.

환경부는 금년부터 시행하는 대기환경규제지역 VOC 규제대상 업종에 자동차 제조업, 유기용제와 페인트제조업, 선박과 대형 철구조물제조업, 폐기물보관 및 처리시설, 자동차정비시설 등 7개업종을 추가하기 위한 고시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2월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인천, 경기 등 대기환경규제지역내 이들 신규 제업종과 석유·화학제조시설, 저유소와 주유소 등 기존의 규제대상 업종은 내년 말까지 VOC 누출방지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도장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등 VOC 배출 비중이 높은 업종을 추가 고시하고 소규모 인쇄시설과 세탁시설을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켰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암성분이고 오존스모그 생성물질이며 악취 원인물질인 VOC규제업종 확대로 대기오염을 줄이고 특히 안산 신도시와 인천지역 악취민원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VOC는 환경오염뿐 아니라 조혈·생식기능 장애, 급만성 중추, 말초신경 장애등을 유발하는 물질로 미국, 일본, 유럽 등지에서 배출과 누출을 강력 규제하고 있다.

국내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질은 작년 한해 66만7천t이 배출된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주요 배출원은 페인트산업(46%), 자동차 등 교통수단(36%), 주유소와 저유소(11%) 등으로 나타났다.

중소업체 환경관리 지원 호과 크다

대기업의 유휴 환경설비를 중소기업에 제공해주고 환경기술지원단을 파견하는 등의 환경관리 지원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지난12월23일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96년부터 대구·경북지역에 자금압박등으로 환경설비 투자를 제대로 못하는 중소기업 등에 대기업체의 유휴 환경설비를 확보,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환경기술지원단을 보내 기술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환경청은 올들어 지금까지 구미LG 마이크론(주) 1공장과 삼성코닝(주), 삼일염직(주), 대구염색공단 등 4개 업체로부터 폐수찌꺼기를 짜내는 탈수기, 약품탱크, 집진시설 등의 각종 환경설비 10종 38기를 기증받아 S도급 등 16개 중소기업체에 제공했다.

또 대학교수 등 환경기술 전문인력 30명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지원단의 경우 올해 이 지역의 상습 위반업체나 기술지원 희망업체 등 23개업체를 대상으로 방지시설의 처리효율 및 처리방법, 운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 기술지도를 폈다.

이 결과 서구 이현동 P염직의 경우 지금까지 최종 처리한 폐수가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이 1백20~1백30ppm이었으나 기술지원단의 기술지도 이후 50~60ppm을 유지하는 등 폐수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또 달서구 신당동 Y모직가공업체도 최종 처리한 폐수의 탁도가 심했으나 공정개선과 관리방법 변경으로 탁도를 크게 낮게했고 O염직도 작년에 기준치이상 폐수방류로 단속됐으나 폐수처리방식을 변경, 기준치이하로 폐수를 처리하는 등 대부분의 업체가 기술지원 효과를 보고 있다.

대구환경청 관계자는 "환경관리가 취약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대기업의 유휴환경설비 제공과 환경기술지원이 환경개선에 큰 효과를 보고 있어 앞으로 이 제도를 더욱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린벨트제도 개선시안’ 재검토 요구

환경부는 지난 11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협의회’가 내놓은 그린벨트제도 개선시안 중 도시권별 구역전체 해제 방안을 전면 재검토할 것 등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지난 12월28일 건설교통부에 보냈다.

건설교통부의 주도로 만들어진 이 그린벨트제도 개선시안은 그린벨트로 지정된 도시권별 구역전체 해제 등 그린벨트의 광범위한 해제방안을 담고있다.

환경부는 이날 건설교통부에 전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시안에 대한 의견」이라는 문건에서 ‘도시권별 구역전체 해제’는 악영향이 큰 점을 감안, 도시 확산 우려가 없는 등 그린벨트 지정 실효성이 완전히 상실된 도시권에 한정할 것을 요구했다.

‘도시권별 구역전체 해제’는 그린벨트로 지정된 수도권 14개 도시권을 개발밀도, 환경오염 등 각종 지표를 토대로 종합평가해 실효성이 낮은 권역은 전면 해제하겠다는 것으로서, 사실상 이 시안의 핵심을 이루는 내용이다.

환경부는 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심사를 위해 국토개발연구원이 독점하고 있는 ‘전체해제’ 도시권 선정에 관한 작업에 환경전문가를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안 중 그린벨트내 취락지구를 지정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과 관련, 환경부는 공공시설과 공익적 시설설치를 최대한 억제하고 구역내 입지가 불가피한 시설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부과하는 ‘존치지역’의 관리방향과 부합되도록 규제수준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해제지역의 관리와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도시권 별로 도시면적의 일정비율 이상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 ▲해제지역을 상세계획구역으로 지정, 저밀도 개발을 유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환경부는 지역여건에 따라 존치지역내 옥외체육시설을 허용하지는 시안의 방안에 대해서도 옥외체육시설을 허용할 경우 그린벨트의 훼손우려가 크다며 자연친화적인 생태공원, 자연학습원의 설치에 한정해야 한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초중고 교사 88.6%가 환경보호론자”

대다수 초중고 교사는 ‘개발’보다 ‘환경보호’에 가치를 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12월30일 그린웨이리운동연합이 서울시 초중고 교사 2백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88.6%가 경제성장을 위한 개발정책에 비해 환경보전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각종 오염에 대한 책임과 관련, 대기 오염과 하천오염은 기업(56.9%, 52.2%)을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식수오염과 자연경관 훼손은 국가(37.4%, 57.9%)가 1위로 꼽혔다.

쓰레기 문제는 개인의 책임을 지적한 응답자가 74.5%에 달해 가장 많았다.

초중고교가 환경교육을 제대로 채택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담당할 교사가 없다’는 응답이 3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나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는 응답도 56.8%에 달해 환경교육 실시를 위한 전반적인 준비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환경교육 프로그램으로는 응답자의 46.9%가 환경윤리 철학이 가장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며 환경실습 교육을 꼽은 비율도 46.4%에 달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기여하고 있는 조직으로는 민간환경단체를 꼽은 응답자가 64.3%로 가장 많았다.

그린웨이리운동연합은 “설문조사결과 환경 실습교육과 환경윤리철학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고 있으나 프로그램 및 자질있는 교사 등의 결여로 환경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환경호르몬 신진화에 중420억원 투자

환경호르몬 연구와 한국형 소각로 개발 등 환경분야 기술개발에 1년간 정부와 민간 공동출자금 420억원이 투자된다.

국립환경연구원(원장·주수영)은 환경기술 수준을 선진화하기 위해 올 한해 정부에서 122개 과제에 236억원, 민간에서 184억원 등 모두 42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고 지난1월 5일 밝혔다.

환경연구원 나진균 운영실장은 "새해 연구개발 과제는 경제난으로 위축된 민간부문의 환경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지난 92년부터 구축돼온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소각로 개발 등 실용적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환경연구원은 '고효율 소각로 배출가스 처리장치 개발 상용화' 과제를 설정, 소각장에서 나오는 다이옥신과 수은, 염화수소 등 특정오염물질을 제거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이 과제가 성공적으로 수행돼 실용화될 경우, 소각장의 오염물질 감축에 쓰이는 고가의 활성탄과 촉매제의 수입 대체로 매년 650억원의 외화를 절감하고 200억달러에 달하는 이 분야 세계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환경연구원은 또 환경호르몬의 검색 시험법 개발을 통해 환경중에 미량으로 존재해도 내분비 장애를 일으켜 생식이상과 지형을 유발하면서 면역기능도 저하시키는 물질의 내분비계 파괴독성을 규명하기로 했다.

연구원은 이밖에 환경기술개발 과제로 ▲섬지방의 경제적인 해수 담수화 기술 ▲저공해 경유차 엔진 개발 ▲휘발성 유기화합물과 악취 제거장치 등의 상용화 등도 선정했다.

광양만 권역 '대기환경규제지역' 추진

환경부는 2011년까지 대규모 국가공단이 조성될 예정인 광양만권역 전체를 올해 상반기 중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묶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정부의 광양만권역 개발계획의 대폭적인 수정이 불가피하고 지역내 각 가정의 난방시설 기준과 운행차량의 배출가스 기준도 강화해야돼 정부부처간, 정부와 주민간 마찰이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1월7일 환경부에 따르면 공단개발로 환경악화가 우려되는 광양만권역 5개 시.군을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광양만권역 환경개선대책」시안을 마련, 이 시안을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전남도, 경남도에 보내고 2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

이 시안은 2011년까지 대규모 컨테이너부두, 화력발전소, 철강,석유화학 벨트등 국가공단이 조성되는 2천40만평 규모의 하동, 순천, 여천 등 광양만권역 전체를 '대기환경 규제지역'으로 묶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환경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광양 컨테이너 부두확장 작업이 끝나는 2011년에는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현재보다 2~3배 급증, 환경재앙이 우려됨에 따라 저황, 청정연료 사용 등 오염저감대책을 마련토록 산자부 등 관계당국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광양만권역내 여천공단에 대해서는 96년에 이미 정부가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 공장시설의 오염물질 배출을 규제해왔으나 이 시안대로 공단지역을 포함한 광양만권역 전체가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산업시설 뿐 아니라 일대의 주거지역과 차량 등도 오염물질 배출을 감축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2011년 광양만권역의 대기의 질이 국가환경기준을 충족시키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